

# 19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치학 전공  
aristota@chol.com

- I. 머리말
- II. 남북협상론의 등장 배경과 북한정권의 남북협상 제의
- III.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동조
- IV. 남북협상에 대한 남한 우익, 소련, 미국의 대응
- V. 평양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
- VI. 결론

## I. 머리말

1948년 남북한의 정치세력들 간에 전개된 남북협상은 우리 민족의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적었고, 기존 연구들은 이러저러한 결함들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1948년 남북협상의 종합적인 진상과 본질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해 남한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학술적 논문과 저서들 가운데 주요한 것들로는 강만길의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동아일보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1, 동아일보사, 1987, 201-223쪽), 서중석의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한울, 2000), 서중석의 「남북지도자 회의 - 연석회의와 남북협상」(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2002, 202-221쪽), 도진순의 「분단 전후 임시정부계열 민족주의자의 통일운동」(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613-640쪽), 신복룡의 「남북협상」(신복룡, 『한국 분단사 연구』, 한울, 2001, 499-502쪽)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발표된 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는 정리근의 『역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이다. 정리근의 저서 이전에 북한에서 발표된 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모든 논저나 회상기는 정리근의 저서에 수렴되었으며, 정리근의 저서 이후에 발표된 48년 남북협상에 관한 북한의 논저들은 정리근의 저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리근의 저서를 비롯한 48년 남북협상에 관한 북한의 논저들은 학술적 연구가 되기에는 결함이 너무 많다.<sup>1)</sup> 남한에서 발표된 48년 남북협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학술적 지향성을 가진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함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48년의 남북협상의 진상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남북협상

---

1)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정리근의 저서를 비롯한 북한의 문헌들을 참고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로서 참고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추론을 위한 자료로서만 참고했다.

에 참여했거나 개입했거나 혹은 영향을 미친 모든 행위자들의 남북협상 관련 활동을 다면적으로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연구들은 모두 그러한 다면적인 서술과 분석을 하지 않고, 김구·김규식의 활동을 중심으로 48년의 남북협상을 서술·분석했다. 신복룡의 논문은 두 김의 남북협상 관련 활동 외에 남북협상과 관련한 북한 측의 의중과 남한 우익세력과 미국의 대응 등을 서술하긴 했으나 그 내용이 극히 소략했다.

둘째, 48년 남북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북한정권과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들이 남북협상을 최초로 제안한 47년 10월의 국내외 정세 및 남북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진행된 48년 3-4월의 남북한 정세를 고려하면서 그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남북협상을 제안·추진한 동기와 목적 및 남북협상 진행상황 등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은 모두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지 않게 되면 남북협상을 제안·추진한 인사들이 외면적으로 천명한 발언에만 의존하여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자기의 행동이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취해진 것인지에 관한 정치인 및 정치집단들의 외면적 주장은 언제나 미화되며 진정한 동기·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셋째, 48년 남북협상의 진상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남북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에서 채택된 문서들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연구들은 문서들의 내용을 아예 분석하지 않았거나 분석하더라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한 문서들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48년의 남북협상에 대해 서술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서술을 넘어설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결함들로 인해 48년의 남북협상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그것의 어느 한 측면만을 그려내는 데 그쳤고, 따라서 종합적인 진상이나 그것의 본질과 의의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 논문은 기존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함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 II. 남북협상론의 등장 배경과 북한정권의 남북협상 제의

### 1. 남북협상론의 등장 배경

48년 4월의 남북협상은 47년 10월부터 남북한 양 지역에서 등장한 남북협상론이 발전하여 성사된 것이다. 따라서 48년의 남북협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47년 10월 남북협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남북협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정세 및 한반도 내부의 정치정세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당시의 국제정세는 한국문제의 처리방법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 간의 입장대립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한반도의 통일임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모스크바협정의 틀 속에서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전의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문제를 모스크바협정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다.

미국은 47년 8월 26일 미소공위에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한반도 공동신탁통치국으로 내정된 미·소·영·중 4개국 외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한국문제를 4개국 외상회의로 넘기는 것은 모스크바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미국은 9월 16일 한반도문제를 미소공위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4개국 외상회의로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유엔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소련에 통고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한반도문제를 유엔총회 의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총회는 9월 23일 표결을 통해 한국문제의 의제채택을 결정했다.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자 소련은 9월 26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48년 초두까지 남북한에서 미·소 양군을 철수한 다음 한국인들끼리 협의해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sup>2)</sup>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제의가 '소련이 북조선에 설치한 괴뢰정권의

2)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47.

전조선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기도가 준비된 데서 나오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서,<sup>3)</sup>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밀어붙였다.

남북협상론이 등장한 47년 10월 한반도 내부의 정치정세는 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공고화, ②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 심화, ③ 남한의 정치적 혼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북조선 민주혁명기지론<sup>4)</sup>에 입각하여 46년 2월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임시정부를 수립하고<sup>5)</sup> 그 임시인민위가 중심이 되어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개혁’을 단행했다.<sup>6)</sup> 민주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 중요 산업 및 대기업체의 국유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자들의’ 제거, 학생과 성인들을 상대로 한 사회주의 사상 주입교육 등이다. 북한의 민주개혁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북한에서는 임시정

---

vol.VI(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p.816-817; 《조선일보》, 1947년 9월 27일자.

- 3) 당시 서울에 있는 미국의 고위관리는 미·소 양군이 조기에 철수하고 나면 북한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의 지지를 받는 공산정권이 남을 것이고, 남한에는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우익이 우세한 과도입법의회와 도합 5만 명 정도의 경찰관, 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분석했다. 《동아일보》, 1947년 9월 28일자.
- 4) 북조선 민주혁명기지론에 대한 북한 학자의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를 강점한 조건 하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쏘베트 군대가 진주한 북반부를 민주기지-혁명 근거지로 건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쟁취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 민주 기지-이는 민주주의적 근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혁명 근거지를 말하는 것이다. 혁명 근거지라 함은 전체적 또는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승리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혁명의 전반적 또는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혁명 역량을 축적하며 그에 의거하여 투쟁함으로써 전반적인 또는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물질적 기초로 되는 혁명의 원천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최영환, 『해방 후 조선 혁명에 있어서의 북반부 민주 기지』, 『역사과학』 10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역사학연구소, 1955), 47쪽에 서술된 것이다.
- 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의 단독정부라는 사실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사항이다. 1946년 2월 당시 북한의 공산당과 좌익단체들은 임시인민위원회를 ‘정권’이나 ‘정부’라고 지칭했고, 훗날 발행된 북한의 공식 역사책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라고 지칭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156-157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서울: 나남출판, 2003), 153-154쪽;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228쪽.
- 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목적이 민주개혁, 즉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한길, 앞의 책, 226쪽과 228쪽에 설명되어 있다.

부를 정식정부로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소련과 북한정권<sup>7)</sup>은 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실시하고, 47년 2월에는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토대로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인민회의를 토대로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정식정부를 수립했다. 단독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과 동시에 북한정권은 계획경제 실시를 개시했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은 어느 한쪽에서 체제변혁을 위한 격렬한 혁명이 성공하지 않는 한 동질적인 사회로 통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북한사회를 남한사회와 완전히 이질적인 사회로 만들어놓고, 그해 5월에는 '인민집단군'이라는 정규군을 만들어 체계적인 군사력을 확보한 데 이어 8월부터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남북한통일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주혁명기이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민주화가 일정 수준 공고해지자 이제 북한을 기지로 하여 남한을 '민주화'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소련과 북한 공산세력이 사회주의화된 북한을 기지로 하여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남한의 정치정세는 분열과 혼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실정으로 인해 남한민중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한의 정치세력들은 극심한 분열상태에 있었다. 좌익세력은 통합되어 있었으나 중도세력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투당한 중도좌파와 순수 중도파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우익진영은 정부수립 방법을 둘러싸고 이승만-김성수세력과 김구세력이 갈등하고 있었다.

남북협상론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등장배경에 비추어볼 때, 남북협상이 진행된다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유엔총회가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남한 정부의 수립이 지연되면서

7) 이 논문에서 '북한정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1946년 2월부터 북한에 정권이 수립되었고, 그것이 북조선공산당 → 북조선로동당만의 정권이 아니라 형식상 다른 정당들도 포함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헌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및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련립정권', '혁명정권', '인민정권'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리나영, 「민주기지 창설과 강화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력사과학』 1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학연구소, 1955년), 72쪽, 74-75쪽.

남한의 정치적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어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전국적 민주화가 용이해질 수도 있었다. 47년 10월 북한정권과 남한의 중도좌파 정당들이 남북협상을 제안한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 2. 북한정권의 남북협상 제의 및 남한 정치인 포섭공작

소련이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심의를 반대하면서 48년 초까지 미·소 양군을 철수하고 한국인들끼리 통일정부수립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의한 직후인 47년 10월 3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조선에서 쏘미 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책동을 파탄시키며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를 세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구국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8)</sup>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은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의이며, 이승만-김성수계열의 ‘극반동세력’을 제외한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북한의 문헌에 의해 해석된다.<sup>9)</sup>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립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의 정당·사회단체 인사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일성은 남북연석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인사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sup>10)</sup>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남한 인사들의 포섭공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섭공작을 전개한 거물급 공작원으로 유명한 사람이 성시백이다. 성시백의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 《로동신문》은 당시 남한에서 활동했던 북로당 공작원 성시백의 활동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남조선에서 ... 중간세력을 쟁취하는 문제는 통일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 성시백 동지는 이에 대처하여 중간 정당·단체들을 반미지주통일을 위한 통일전선대오에 결속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았다. 그는 당시 남조선 중간 정당·단체들 가운데서 제일 영향력이 강한 근로인민당을

8) 정리근,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5쪽.

9) 위의 책, 16-17쪽.

10) 정리근, 위의 책, 18쪽.

비롯한 5개 정당을 포섭하기 위한 ... 통일전선공작을 벌려 처음에는 5개 정당을, 다음에는 10개 정당과 그 산하 14개 단체를 그리고 그 후에는 중간 및 우익 정당, 단체들까지 통일전선에 망라시켜 13정당협의회까지 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1)</sup>

북로당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통해 남한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공작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포섭해 놓은 남한 정치인들을 북으로 불러들여 남북연석회의의 프로젝트 실천을 지시했다. 이 시기에 북로당에 불러간 남한 중간과 정당소속 정치인들로는 홍명희, 백남운, 김원봉, 박건웅 등을 들 수 있다.<sup>12)</sup> 이들 가운데 중간과 정당 및 김구·김규식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홍명희이다. 홍명희는 46년 3월 말부터 김일성에게 포섭되었으며, 그해 8월에 북한의 지원을 받아 민주통일당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해온 인물이다.<sup>13)</sup> 홍명희는 47년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이때 김일성 등 북로당 지도부는 홍명희에게 남북협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보다 많은 남한의 정당들을 남북협상 동조세력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주문했다.<sup>14)</sup>

북로당은 이처럼 대남공작을 전개하면서 47년 11월 16-17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남북연석회의의 기본 골격을 짰다. 이때부터 남한 내 북한 공작원들의 물밑 움직임이 속도를 더했고, 남한 중도·좌익진영의 수뇌들도 38선을 들랑거렸다.<sup>15)</sup> 이 무렵 김일성도 성시백을 직접 만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간 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구와 김규식에게 합작의사를 전달하여 남북연석회의의 실현에 그들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다.<sup>16)</sup>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성시백은 두 김을 남북연석회의에 끌어들이는 포섭공작을 전개했다. 성시백의 공작에 관해 한 연구가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소개했다.

“성시백은 김구·김규식 등의 우익지도자들의 측근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11) 《로동신문》 1997년 5월 26일자에 게재된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렬사: 신념과 절개를 목숨바쳐 지킨 성시백 동지의 결사적인 투쟁을 두고」 제목의 기사.

12)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서울: 중앙일보사, 1993), 299쪽.

13) 위의 책, 218-219쪽.

14) 위의 책, 220-221쪽.

15) 위의 책, 310-311쪽.

16) 《로동신문》 1986년 4월 19일자에 게재된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 남북연석회의와 백범 김구선생을 회고하여」 제목의 기사.



김규식의 비서실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권태양과 송모는 … 성시백 선이었다. 성시백 밑에 있던 서완석 밑에 송모가 연결됐고, 성시백 밑에 있던 강병찬 밑에 권태양이 연결됐다. … 김구 쪽에서는 그의 맏며느리 안미생의 사촌동생인 안우생이 북쪽과 연결되어 있었다. … 임정계열인사 엄항섭도 성시백과 비밀리에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 김규식 밑에서 민족자주연맹 간부로 일하던 박건용이나 임정계통의 김찬 등도 성시백 선의 핵심인물이었다. … 조소앙의 비서 김홍권도 강병찬과 연결되어 있었다.”<sup>17)</sup>

김일성은 47년 12월 무렵 ‘남한에서 온 한 혁명가’를 만나서 이승만, 김성수 등 ‘극소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남조선의 애국적인 모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남북연석회의의 소집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북로당의 남북연석회의의 소집방침을 지지하고 나서게 될 때 북한정권은 남북연석회의의 소집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sup>18)</sup> 여기서 말하는 ‘남한에서 온 혁명가’란 북한정권에 포섭된 남한인사를 뜻한다.

북로당은 47년 12월 23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한 내 단선단정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치사업의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했다. 그 사업은 두 갈래로 계획되었으며, 하나는 공작원을 동원한 포섭공작이고, 다른 하나는 외형상 중도와 정당의 형태를 보이면서 내면적으로는 좌익의 프락션이 깊이 침투해 있는 정당들, 즉 근민당, 민독당, 인민공화당, 민주한독당 등과 제휴·협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북로당은 12월 말부터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연락실을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하고 서울에서 공작활동을 전개중인 성시백 등의 간첩망도 강화했다.<sup>19)</sup>

그러한 물밑 공작이 어느 정도 진척되자 김일성은 48년 1월 중순 남북연석회의의 소집을 제안하는 편지를 비밀리에 남한의 김구·김규식과 정당·사회단체 등에 보냈다.<sup>20)</sup> 남북연석회의의 혹은 남북협상에 대한 남측인사들의 지지의사를 확인한 뒤, 북로당은 48년 2월 초순 남로당 지도부와 더불어 양측 정치국연석회의를 열고, 인공 수립을 예견한 남북제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소집문제를 토의·결정했다. 회의는 또 남한에서 유엔위원단과 단선에 대한 반대투쟁이 고조되고 북한에서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가 끝나는 4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sup>21)</sup>

17) 유영구, 「거물간첩 성시백 프로젝트(상)」, 『월간중앙』 1992년 6월호, 651쪽.

18) 정리근, 앞의 책, 28-29쪽.

1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313-314쪽.

20) 《로동신문》, 1986년 4월 19일자 의 앞서 인용된 기사: 정리근, 앞의 책, 30쪽.

### III.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동조

#### 1. 남한 중도파의 남북협상 제의 및 추진

북한정권이 남북협상을 제의한 것과 비슷한 시기인 47년 10월 초부터 남한의 중도파 군소정당들도 남북협상을 제의했다. 47년 10월 초 남한 정계에서 제일 먼저 미·소 양군의 조속 철수와 남북협상개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좌경중도파 정당인 근로인민당(약칭, 근민당)이다. 근민당은 북로당 및 남로당의 프락치가 많이 침투해 있는 정당이고, 북로당 공작원인 성시백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정당이었다.<sup>22)</sup> 근민당은 10월 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소 양군이 조속히 동시 철퇴하고 조선민족의 자주자결적 권리를 승인하는 동시에 정권을 조선인민에게 이양하여 주기를 주장한다'고 천명했다.<sup>23)</sup> 근민당의 이 성명에는 남북협상에 해당하는 분명한 용어가 없지만, '조선민족의 자주자결적 권리 승인'이라는 표현이 남북협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정계에서 남북협상을 명시적으로 가장 먼저 제의하고 나선 것은 한독당이다. 한독당은 10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소앙이 이끄는 한독당 내 중도파의 주도로 '남북대표회의를 조직'하여 38선의 타개(미·소 양군 철퇴), 남북 통일선거의 절차 및 집행, 중앙정부 조직 등의 문제를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sup>24)</sup> 한독당의 결의가 발표된 후 민족자주연맹 준비위원회, 근민당, 신진당, 사회민주당(약칭, 사민당) 등 중간파 정당들이 미·소 양군 조속철수와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sup>25)</sup>

개별적으로 남북협상을 제의했던 한독당 내 중도파와 근민당 민주독립당(약칭, 민독당) 등 10여 개의 중도파 군소정당들은 11월 4일 회합을 가지고 미·소 양군의 즉시 철수와 남북대표회의의 구성을 촉구하면서 남북대표회의 구성 준비를 위해 '각정당협의회'(약칭, 정협)를 결성하기

21) 김광운, 앞의 책, 595쪽.

22)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어느 혁명가의 수기』(서울: 사계절, 1987), 178쪽; 유영구, 앞의 글, 651쪽.

23) 《조선일보》, 1947년 10월 9일자.

24) 《동아일보》, 1947년 10월 19일자.

25) 《서울신문》, 1947년 10월 23일자; 《조선일보》, 1947년 10월 25일자.

로 합의했다. 정협에 참여하고 있는 중간과 정당들은 대부분이 북로당이 나 남로당의 프락치들이 침투해 있었다.<sup>26)</sup> 정협은 같은 달 17일 회합을 갖고, 3일 전 유엔총회가 채택한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을 실시하여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구성하라는 결의를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남북분열을 초래하게 될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서 미·소 양군의 조속철수와 남북정당대표회의의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sup>27)</sup>

남북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과세력의 활동은 정협의 그러한 성명 발표가 김구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잠시 후퇴했다. 당시 김구는 소련이 제안한 미·소 양군 조기철수론에 반대하고 유엔총회의 한국문제결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이승만의 우익진영 통합노력에 협조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끄는 한독당이 미·소 양군 조속철수론을 지지하고 유엔총회의 한국문제결의를 비판하며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정협의 성명에 참여한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 김구는 정협의 성명이 발표된 이틀 후 한독당 당무회의에서 한독당의 정협 참여 중단을 지시했다. 뒤이어 한독당은 김구의 지시를 어기고 정협에 계속 참가한 한독당 중도파 중간 간부들을 '모당(남로당을 지칭)의 자금을 받고 한독당 분열공작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제명했으며, 그 여파로 한독당 내에서 남북협상 주장을 주도해 온 중도파 지도자 조소앙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구의 강력한 견제로 정협의 활동은 침체되었으나 북로당에 포섭된 인사들이 조종하는 중간과 정당들의 남북협상 공작은 계속되었다. 홍명희의 민독당과 백남운의 근민당 등 북로당과 연결된 중간과 정당들은 정협을 유지하는 동시에, 김규식을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중간과 연합체인 민족자주연맹(약칭, 민련)의 결성을 추진하고, 민련으로 하여금 남북협상을 주장하게 만드는 활동을 전개했다. 홍명희와 백남운 등의 노력, 그리고 북한공작원 성시백에 연결된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47년 12월 20-21일 민련결성대회가 열렸고, 이 대회에서 남한선거를 반대하고 '남북통일 중앙정부의 조속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정치단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민련의 입장이 천명되었다.<sup>28)</sup>

26) 해방정국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총책 성시백의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 고영민(고준석의 가명)은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 일파, 농민당, 사회대중당, 신한독립당, 근로인민당 등에 대한 프락치공작을 전개했음을 고백했다. 고영민, 앞의 책, 178쪽 참고.  
27) 《조선일보》, 1947년 11월 19일자.

북로당에 조종되는 중간과 군소정당의 연합체가 남북협상을 집요하게 주장·추진하고 있던 시기에 그들의 활동을 고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구가 47년 12월 22일 돌연 이승만이 추구하는 남한선거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익진영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김구의 이러한 행동은 중간과 정당들의 남북협상 추진에 대한 제동력이 해소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협상 추진에 대한 김구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 2. 김구·김규식과 북한정권의 접촉

북한정권과 남한 중도파가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 그룹에 끌어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김은 47년 12월 20일까지는 남북협상에 동조하지 않았다. 두 김 가운데 김규식이 먼저 남북협상에 대해 동조 태도를 보였다. 김규식은 47년 12월 20일 자기를 지도자로 추대하여 결성된 중간과 정당들의 연합체인 민련이 남북협상 추진을 천명했을 때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김규식이 민련의 남북협상 제의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남북협상론에 소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47년 12월 하순이라는 시점에서 남북협상론에 대한 김규식의 태도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민련이 결성되기 1주일 전까지도 소련의 미·소 양군 조속철수론에 반대하고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남북한 총선을 실시할 것을 지지했으며, 설사 소련의 반대로 인해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어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그 정부는 남한의 단독정부가 아니라 한민족 중앙정부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했다<sup>28)</sup>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남북협상에 대한 김규식의 동조 태도는 처음엔 추종자들에게 떠밀려서 취해진 것이었다.

김구도 47년 12월 하순, 우익진영의 남한선거관철 노선으로부터 이탈하기는 했지만 곧장 남북협상론에 동조하지는 않았다. 불과 10여 일 전에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정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독당 중간간부들을 제명하기까지 한 김구로서는 남북협상론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48년 1월 하순 남북협상에 동조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28) 《한성일보》, 1946년 12월 21일자.

29) 《서울신문》, 1947년 12월 14일자.

천명했다. 두 김은 48년 1월 하순, 유엔위원단과의 면담에서 자기들이 남한지역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한다는 점과 남북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다.

남북협상에 대한 동조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못하던 두 김이 남북협상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는 민족분단을 지지하겠다는 그들의 민족애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요인은 홍명희의 두 김에 대한 설득이다. 두 김은 홍명희가 북로당에 포섭된 사실과 북로당으로부터 김구·김규식을 남북협상 그룹에 끌어들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줄 알지 못한 채 홍명희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한 홍명희가 48년 새해 벽두부터 김구와 김규식 등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열심히 접촉하면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 구국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sup>30)</sup> 홍의 그러한 설득은 두 김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요인은 47년 12월 하순부터 부쩍 강화된 북로당의 김구·김규식 포섭공작이다. 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김의 측근 인사들의 상당수가 북로당 공작원 성시백에게 포섭된 자들이었으며, 북로당은 47년 12월 23일 중앙위원회 회의 이후 대남공작을 크게 강화했다. 북한의 문헌에 따르면, 성시백 자신이 직접 김구를 만나서 남북협상론 동조를 설득하기도 했다.<sup>31)</sup> 북로당의 공작강화는 두 김 측근들의 두 김에 대한 설득 강화로 연결되었을 것이며, 신뢰하는 측근들의 설득은 두 김의 남북협상론 동조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 요인은 48년 1월 중순 두 김을 비롯한 남한의 정당·단체 지도자들에게 비밀리에 전달된 김일성과 김두봉 공동명의로 남북연석회의 참여 유도 편지이다. 이러한 비밀편지는 두 김의 남북협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남북협상 추구로 입장을 선회한 두 김은 한편으로는 남한 총선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북한의 김일성 및 김두봉과 접선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두 김의 북한과의 접촉은 이미 북로당에 포섭된 자신들의 측근 및 위장 중도와 인사들을 통해 진행되었다.<sup>32)</sup>

3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221쪽.

31) 《로동신문》, 1997년 5월 26일자의 앞서 인용된 기사.

김구와 김규식은 2월 16일 “남북정치지도자 간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 수립과 새로운 민주정부 건설에 관한 방안을 토의하자”는 내용의 공동명의로 편지를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비밀리에 보냈다. 두 김의 남북협상 추구로의 방향전환에 대해 북로당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월 중순 홍명희를 평양으로 불러들였다.<sup>33)</sup> 북로당은 흥으로부터 정세보고를 청취한 후 남북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한에 연합전선 성격의 조직체를 만들 것을 지시했으며, 서울로 돌아온 흥은 김구·김규식을 비롯하여 백남운, 조소앙, 여운홍, 유림 등과 접촉하면서 남북연석회의 개최에 필요한 남한 측 준비작업을 전개했다.<sup>34)</sup>

북로당은 홍명희 등을 북으로 소환하여 남한 정세를 파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북로당 대남공작의 책임자인 연락실장 임해를 서울로 파견하여 남한 정세 및 김구·김규식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갔다. 북로당은 남한 정치인들의 보고와 임해로부터의 현장보고를 종합하여 판단한 후 김구·김규식과 연합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sup>35)</sup>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에 밀서를 보낸 후 북한으로부터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남한선거 반대투쟁을 강화했다. 2월 26일 유엔소총회가 남한만의 선거실시를 결의하자, 김구는 남한만의 선거실시를 반대한다고 선언했고, 김규식은 남한만의 선거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선거에는 불참한다고 선언했다.<sup>36)</sup> 김구는 뒤이어 한독당으로 하여금 남북요인회담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도록 하고, 김규식·홍명희와 더불어 남한선거에 반대하는 행동통일을 추진하면서 남한선거에 반대하는 ‘7거두 성명’ 발표를 준비했다.

두 김은 자기들이 밀서를 보낸 데 대한 북측의 반응을 조속히 파악하고자 3월 8일 비밀리에 자기들의 연락원들을 김일성에게 보냈다. 김일성은 두 김의 연락원들에게 두 김과의 합작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두 김의

32) 김광운, 『통일독립의 현대사』(서울: 지성사, 1995), 196-221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선인, 2001), 103-107쪽; 유영구, 앞의 글, 650-655쪽 등 참고.

33) 김광운, 앞의 책(1995), 198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221쪽.

34) 김광운, 앞의 책(1995), 191쪽.

3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326-327쪽.

36) 《경향신문》, 1948년 2월 28일자.

연락원들이 북측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서울로 귀환한 후 두 김과 홍명희는 남북협상 지지세력의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남북협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연합체 구성노력은 4월 3일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김일성과 김두봉은 3월 15일 비밀리에 김구와 김규식에게 회신을 보냈으며 같은 편지를 남한의 여타 정당·단체들의 지도자들에게도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sup>37)</sup> 김구·김규식이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안한 것은 남북요인들의 회담인 데 반해, 김일성과 김두봉이 보낸 편지는 많은 수의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 3. 북한 측의 일방적인 회의 준비

북로당은 김일성과 김두봉의 공동명의로 된 편지를 남한 정치인들에게 보낸 데 이어,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연석회의의 남쪽 초청대상자, 명칭, 의제, 개최일자, 진행방법 등을 결정했다. 남한 측 초청대상자로는 김구, 김규식, 조소앙, 박헌영, 허헌, 홍명희, 백남운, 김원봉, 김봉준 등 개별인사와 민련 한독당 등 17개 정당과 사회단체를 선정했다. 회의 명칭은 연석회의로 하고,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전체가 참가하는 연석회의와 남북의 요인들이 참여하는 지도자협의회를 분리하여 개최할 것도 결정했다. 아울러 연석회의 개최를 ① 북조선민전 회의에서 연석회의 개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그것을 평양방송을 통해 남쪽에 알리고, ② 김일성과 김두봉의 연명 편지를 김구와 김규식에게 보내고 뒤이어 남한의 다른 지도자에게 보내며, ③ 북쪽의 정당·사회단체가 남쪽의 연석회의 참가대상 정당·사회단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등 3단계로 남한 측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sup>38)</sup>

그러한 북로당의 결정에 따라, 북조선 민전 중앙위원회는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4월 14일 평양에서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된

37) 정리근, 앞의 책, 38-39쪽; 《로동신문》, 1986년 4월 19일자 앞서 인용된 기사.

38)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329-332쪽.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 성명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은 기만적 방법으로서 수립될 불구적 괴뢰정권을 어떠한 조건으로서든지 결단코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가 동시에 즉시 철퇴한 후 조선인민 자신이 민족적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를 자결하지는 소련정부의 제안을 미국정부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투쟁합시다. … 우리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반대 투쟁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금년 4월 14일 평양시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sup>39)</sup>

평양방송의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며칠 뒤 김일성과 김두봉은 평양방송의 성명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초청서한을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남한 내 남북협상과 정치인들에게 보냈다. 김일성이 초청장을 보낸 남한의 정당·사회단체는 한독당, 민주독립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청우당, 사회민주당, 독립노동당, 신진당, 근로인민당, 남로당, 인민공화당, 전평, 전농, 민주여성동맹, 유교총연맹, 기독교민주동맹, 문학예술단체총연맹 등 17개이다.<sup>40)</sup> 뒤이어 북한의 정당·사회단체들의 공동명의로 된 초청서한이 북로당 공작원들에 의해 김구·김규식을 포함한 남한의 남북협상과 정당·단체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평양방송의 성명과 초청서한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제의는 ‘제의’라기 보다는 ‘통고’였다. 그 내용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한총선을 반대하는 남북조선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소련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한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일정부 수립을 의논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추진했다면 북한이 통고한 이러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두 김은 북측의 제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미리 다 준비된 잔치에 참례만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杞所가 없지 않지만’ 자기들이 남북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평양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sup>41)</sup>

두 김은 일단 평양회의에 참석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한 뒤 회의일정과 진행방법을 조정하기 위해 자기들의 연락원들을 북으로 파견했다. 김구

39) 박광, 『진통의 기록: 전조선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문헌집』(서울: 평화도서주식회사, 1948), 2쪽; 《조선일보》, 《중앙일보》, 1948년 4월 1일자.

40) 《조선일보》, 1948년 3월 31일자.

41) 《조선일보》, 1948년 4월 1일자.



의 연락원 안경근과 김규식의 연락원 권태양은 4월 8일과 9일 평양에서 각각 김일성과 김두봉을 면담하여 김구·김규식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회의개최일자를 연기할 것, 참가인원을 확대할 것, 금번 회담에서는 남북의 정치상황을 백지로 환원하여 남북통일문제에 한해서만 협의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sup>42)</sup> 그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있을 수 없다. … 두 분 선생께서 무조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상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회답했다.<sup>43)</sup>

평양으로부터 돌아온 연락원의 보고를 들은 후 김구는 평양회의에 참석하기로 확정했으나, 김규식은 평양행을 주저했다. 당시 김규식은 평양에 가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평양에 가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른바 ‘문화인 108인 성명’<sup>44)</sup>이 발표되고, 유엔위원단의 좌경 성향 위원인 잭슨(호주 대표)과 패터슨(캐나다 대표)이 김규식을 방문하여 평양회의에서 북측이 합리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5월 10일로 예정된 남한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규식의 평양행을 유도하는 바람에 평양행을 결정하게 되었다.<sup>45)</sup>

북한정권은 남북연석회의의 개최 일정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의에 관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준비해 왔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김일성은 이미 3월 17일에 연석회의에 제출될 문건들과 그 내용에 대한 지침을 지시했고, 실무자들은 10여 일 만에 그 문건들의 초안을 모두 준비했다. 김일성은 4월 1일 북조선 민전 중앙위에서 연석회의에서 토의할 의제와 토론내용의 작성을 지시했고, 연석회의에 참가할 북한 측 인원을 300명으로 하고 그 300명을 각 정당·단체별로 배정할 숫자까지 지시했으며, 4월 4일에는 실무자들이 작성해 온 문건들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고 수정지침을 지시하기도 했다.<sup>46)</sup> 북한의 문헌이 서술한 대로 모든 것을 김일성이 다 지시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겠지만, 북한정권과

42) 《경향신문》, 1948년 4월 13일자.

43) 송남헌, 『해방 3년사』Ⅱ(서울: 까치, 1985), 550쪽; 김광운, 앞의 책, 214쪽.

44) 문화인 108명의 명의로 발표된 김구·김규식의 평양행을 호소·격려하는 성명이다. 1948년 4월 14일에 발표된 그 성명의 작성과 발표에는 북로당에 포섭된 인사들(홍명희와 백남운)의 공작이 영향을 미쳤으며, 김규식은 그 성명을 보고 평양행 압력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45) *FRUS*(1948) VI, p.1180.

46) 정리근, 앞의 책, 52쪽, 65-69쪽.

소련군이 연석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준비하여 확정해 놓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 IV. 남북협상에 대한 남한 우익, 소련, 미국의 대응

##### 1. 남북협상에 대한 남한 우익진영의 대응

김구가 1월 28일 남북협상을 제안하자 남한의 우익진영은 김구를 소련의 앞잡이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김구와 김규식이 2월 초 유엔위원단의 메논의장을 만나 남북요인회담 주선과 정치범 석방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익진영은 두 김을 더욱 격렬하게 비난했다. 특히 한민당은 “김구·김규식 양씨가 유엔의 결의와 우리 3천만의 거국적 요망을 무시한 소련의 비민주적 태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도리어 총선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려는 그 진의가 과연 나변에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 실현성이 없는 남북요인회담과 정치범 석방을 운운하며 ... 남로당 주장을 대변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은 실로 유감천만이다”라고 비난했다.<sup>47)</sup> 그뿐만 아니라, 한민당은 자기 당의 핵심간부인 장덕수를 살해한 범인들이 임시정부계열 인사들인 점을 근거로 그 배후에 김구가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군정을 향해 장덕수 암살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고 거듭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구는 마침내 장덕수 암살범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심문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우익진영의 청년단체와 학생운동단체의 소속원들은 김구가 평양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월 19일 서울을 출발하려 할 때는 김구의 거처인 경교장 앞에서 농성을 하며 김구의 출발을 저지하려고도 했다.

우익진영의 단체들이 격렬하게 김구를 비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승만은 김구·김규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삼갔다. 이승만은 김구의 태도를 못마땅해하면서도 김구에 대한 공개비판은 삼갔으며,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한민당을 꾸짖었다.<sup>48)</sup> 이승만은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면서까지 김구를 설득하려 했다. 예를 들면 2월 10일,

47) 《동아일보》, 1948년 2월 10일자.

48) *FRUS*(1948) VI, p.1100 참고.

유엔위원단의 중국대표 류우어완(劉馭萬)의 주선으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회동하게 되었을 때 이승만은 두 김에게 자기는 남북협상을 반대하고 그런 협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로 인해 총선거에 지장이 있거나 총선거를 지연시키는 피해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두 김의 남북협상을 공개비판하지 않고 방관하겠으니 두 김도 총선에 반대하지 말라고 설득했다.<sup>49)</sup> 또한 2월 19일 하지의 관저에서 세 지도자가 회동했을 때도 이승만은 김구와 김규식에게 남한선거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비판은 자기가 받게 될 터이니 유엔소총회가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하거나 남북협상이 실패할 경우 두 김은 남한총선을 지지해 달라고 설득했다.<sup>50)</sup>

이승만은 유엔소총회가 남한만의 총선실시를 결의한 후 두 김이 남한선거를 비판했을 때도 그들을 격렬하게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두 김을 겨냥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총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종 요언을 주작해서 정부를 세우면 미국통치를 받게 된다, 혹은 군정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하는 등의 선동이 있으나 이것은 다 사실도 아니요 사리에도 부당한 것이다. ... 남조선에 정부수립이 되면 남북분열을 영구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총선거를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사리에 당치 않는 말이다. 사람의 몸에 한 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은 편을 살리기를 꾀할 것인데, 다른 방책 없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살아 있는 편까지 마저 죽어버리자는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sup>51)</sup>

이승만이 김구와 김규식을 겨냥하여 내놓은 이 성명의 온건한 표현들은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선거를 추진하는 이승만과 우익진영을 ‘무지몰각한 도배’, ‘태양을 싫어하는 박테리아’, ‘새 일진회’ 등의 거친 표현으로 매도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승만은 두 김이 남한선거 보이콧을 선언한 후에도 “그분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은 하나도 사리에 맞지 않는 언론이다. ... 여하간 이 두 분들이 총선거를 반대하므로 심리상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불행으로 여긴다”라고 부드럽게 논평했다.<sup>52)</sup> 이승만은 김구가 평양으로 갔을 때도 김구의 그런 행동을 직접 비난하는

49)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948년 2월 12일, 14일, 15일자; *FRUS*(1948) VI, p.1109; 로버트 올리버, 박일영 역, 『이승만 비록』(서울: 한국문화출판사, 1982), 180-181쪽; 조규하 외, 『남북의 대화』(서울: 고려원, 1987), 349쪽.

50) *FRUS*(1948) VI, p.1119-1122; 올리버, 앞의 책, 183-184쪽.

51) 《동아일보》, 1948년 3월 2일자.

52) 《동아일보》, 1948년 3월 25일자.

말을 하지 않았으며, 평양연석회 결과가 알려진 후에도 두 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간 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남조선에서 김구·김규식 씨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북행하였으나 그들은 결코 남조선의 대표는 될 수가 없다. 남북요인회담의 대표는 총선거로 수립된 정부대표로 구성하는 데서만 남조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38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북행한 정치가들이 북조선의 김일성 씨와 자기 마음대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 … 금반 남북협상은 소련에게 이용당한 결과 이외에는 하등의 결과도 제레할 것이 없을 것이다.”<sup>53)</sup>

이승만과 우익진영은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추진이나 선거거부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승만은 48년 2월 하순부터는 남한선거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엔소총회가 남한에서의 총선실시를 결의하자 우익진영은 3월 초부터 차질 없는 선거진행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우익진영의 선거진행 보장활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선거인등록과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몽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좌익세력의 폭력적 선거 방해활동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하는 활동이다.

## 2. 남북협상에 대한 소련의 대응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련은 평양연석회의의 준비와 진행을 비밀리에 그리고 치밀하게 지휘·감독했다. 1994년 국내에 공개된 해방 후 북한주둔 소련군의 정치사령관을 역임한 레베데프(Lebedev) 장군의 비망록은 북한주둔 소련군이 남북연석회의의 준비와 진행을 어떻게 지휘했는가를 자세하게 전해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베데프 비망록의 평양연석회의에 관한 부분은 평양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의 준비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들을 소련이 치밀하게 지휘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레베데프 비망록 48년 3월 24일자 메모에는 “남북한 정세 보고는 김일성과, 김두봉과, 허헌과(박헌영이 보고를 못할 경우) 세 개 그룹

53) 《동아일보》, 1948년 4월 28일자.

대표가 한다. 회의일정을 채택한다”라고 기록한 후 회의 첫날에 해야 할 사항, 회의 둘째 날에 해야 할 사항, 회의 셋째 날에 해야 할 사항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지시한 사항도 적혀 있다. 또 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문서로 결정서(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의미),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청하는 미국과 소련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남한총선저지투쟁위원회 조직 결의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sup>54)</sup> 4월 19일 이후 진행된 연석회의의 실제 진행상황은 레베데프의 비망록에 기록된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레베데프 비망록 3월 26일자 메모에는 “남북대표자 연석회의는 모스크바 결정을 기반으로 한다”, “(연석회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료(회의에서 채택할 문서를 의미) 준비가 중요하다” 등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날짜의 메모에는 “대회 개최사를 할 늑은이를 고를 것”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4월 2일자 메모에는 “4월 3일 새벽에 (남한의) 청년대표단이 도착한다. 그들을 마중해야 한다. 그들에게 음식과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기록되었다.<sup>55)</sup>

레베데프 비망록에는 김구와 김규식의 숙소 및 경호, 김구를 대우하는 방법, 연석회의에서의 토의 진행방법과 토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방법 강구, 남한의 중간파 정당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형식, 김구를 회의에 반드시 참여시킬 것 등 연석회의의 준비와 관련하여 김일성과 북한 당국자들에게 지시한 사항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sup>56)</sup>

그의 비망록에는 또 연석회의에서 추가로 채택되어야 할 문건과 그 내용 및 표현방식, 연석회의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방법, 특정인의 연석회의 참석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 김규식의 연락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김규식에게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등에 관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3월 24일자 메모에서 지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서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회의에서 채택된 공식명칭은 「전조선 동포에 격함」)을 채택할 것과 그 내용은 혁명논리와 투쟁전략을 강조해야 하며, 북조선 인민이 선택한 노선이 옳음을 간접적

54) 《중앙일보》, 1994년 11월 15일자.

55) 위 신문의 동일지면.

56) 《중앙일보》, 1994년 11월 16일자에 보도된 레베데프 비망록 4월 2일자, 4월 8일자 내용.

으로 표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sup>57)</sup>

레베데프의 비망록은 4월 19일 연석회의가 개막된 후에도 소련이 연석회의 진행 및 김일성과 남쪽 인사들 간의 회담 등을 치밀하게 지휘·감독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의 비망록 4월 19일자에는 만약 김구와 그의 측근들이 회의를 파탄시키고 퇴장하면 그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미국간첩으로 몰 것<sup>58)</sup>과 회의는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비망록에는 연석회의의 토론에 활용할 연사들을 많이 확보할 것(4월 21일자 메모), 남북요인회담에서 해결할 사항(4월 24일자 메모), 김구와 김규식을 남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여부와 돌려보낼 시점, 김구·김규식에게 절대 굽신거리지 말라는 지시(4월 26일과 5월 3일자 메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레베데프의 비망록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연석회의의 실제 진행상황 및 연석회의 종료 후의 남북요인회담 진행상황이 레베데프 비망록에서 지시된 내용과 완전 일치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북한주둔 소련군은 남북연석회의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그 진행 및 폐회 후의 사후처리에 관한 것까지, 그리고 큰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 정치국의 문서를 토대로 하여, 남북연석회의가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까지 토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북연석회를 소련이 감독·지휘했다고 결론 내린 러시아 학자 란코프(Andrei Lankov)의 주장<sup>59)</sup>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레베데프 비망록이나 란코프의 연구를 토대로 추측해 보면, 남북협상의 아이디어를 맨 처음 제시하고 남북연석회의를 기획한 것도 소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련이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을 저지하기 위해 미·소 양군을 조기철수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한인에게 일임하자고 제의한 후 그것을 현실화하거나 한국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처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북협상을 추진하도록 기획하고

57) 《중앙일보》, 1994년 11월 17일자.

58) 《중앙일보》, 1994년 11월 21일자.

59) Andrei Lankov, "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From Divis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 Th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olitics(13-15 July 2005), pp.76-77.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남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미국은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추진하던 초기에는 부드러운 설득을 통해 그들의 남북협상을 만류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제안한 평양연석회의에 두 김이 참가하려는 입장을 취한 후부터는 그들의 활동을 냉소적으로 방관했다.

미군정은 두 김이 남북협상을 제의하고 평양회의 초청을 받아들인 근본 원인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민족통일이 아니라 남한 정계와 대중 사이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빈약하다는 현실인식과 그로 인한 선거기 피심리라고 판단했다. 미군정의 판단에 따르면, 두 김은 남한선거가 아닌 다른 것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공산주의자들과 제휴하는 남북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였다.<sup>60)</sup>

그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미군정은 김구·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안하고 나선 초기에는 두 김을 설득하여 이승만과 화해시켜 남북협상 추진을 그만두고 유엔결의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지는 48년 2월 19일 자신의 관저로 이승만, 김구, 김규식 3인을 초대하여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미군정의 정치담당 요원들을 김구·김규식과 접촉케 하여 남북협상을 만류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미군정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 및 김두봉과 비밀리에 편지와 밀사를 교환하면서 남북협상을 진전시켰다. 북조선 민전이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두 김이 그러한 북한정권의 제안을 수용하자 미군정은 두 김을 은밀히 설득하여 남북협상을 그만두게 하려던 종래의 방침을 포기했다. 미군정은 두 김의 평양행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남한의 민중들에게 두 김이 추진하는 남북협상이나 평양연석회의가 불합리한 것이고 결국 소련과 북한정권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공개적 선전공세를 전개했다.

그러한 미군정의 선전공세는 미군정장관 딘의 4월 1일자 기자회견에서

---

60)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FRUS*(1948) VI, pp.1177에 기술되어 있다.

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견에서 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석회의를 후원할 의사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방해할 의사 역시 추호도 없다. … 남북 정치협상을 개최하자고 발표한 북조선인들이 진심으로 조선의 통일 및 전조선 국민의 의사에 의한 진정 민주주의 정부수립에 노력하였다고 하면 … 왜 그들은 유엔조위의 북조선 자유 입경을 거부하고 또 북조선인의 총선거 참가를 불허하였던가? … [두 김의 북행에 대한 나의 태도는 냉소적인 것이다.”<sup>61)</sup>

하지는 남북협상과의 일원인 여운홍이 찾아와서 김구·김규식의 연락원으로 평양에 갈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평양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평양에 갈 사람들의 출발과 여행을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는 것이 미군정의 정책이라고 밝히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이어 평양회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북으로 갈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경계선을 넘을 날짜와 시간을 미군정에 사전통고해 주면, 자기는 38선을 경계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인 경찰에게 그 사람들이 남에서 북으로건, 북에서 남으로건 경계선을 건너는 것을 일체 방해하지 말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sup>62)</sup>

뒤이어하지는 4월 6일 평양연석회의를 비판하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에서하지는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회의의 남한대표들을 남한 국민이 선택하지 않고 북한공산정권의 지도부가 지명한 것은 웃기는 일이며, 북한정권이 지명한 남한대표에는 남한의 중요한 정당·단체의 지도자들이 빠져 있고, 그들이 지명한 남한대표들의 대부분은 ‘해방 이후 전조선을 공산 위성국으로 만들기 위해 남조선에서 전개된 공산주의자들의 전복활동을 수행해 온 북조선정권의 꼭두각시들’이라고 비난했다.하지는 이어 북한공산정권이 초청한 남한인사들 가운데 남한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남한 국민들을 대변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연석회의 제안은 남조선의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조선을 장악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sup>63)</sup>

하지는 평양연석회의가 종료된 후인 5월 3일 평양연석회의 참석자들의

61) 《동아일보》, 1948년 4월 2일자.

62) *FRUS*(1948) VI, pp.1169-1170.

63) *FRUS*(1948) VI, pp.1172-1173.



선전내용을 비판하고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세력이 평양연석회의를 무엇에 이용했는지를 분석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에서 하지는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들이 ‘애국적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회의 참석자들은 남한선거가 한반도를 영구적으로 양분시킬 것이라거나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만들 것이라는 환상적인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전했다고 지적하고, 남북회의는 북한정권의 공산주의적 통일헌법을 승인하는 작업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연막이었으며, 그러한 연막 뒤에서 한반도 전체의 ‘조선인민공화국 정부’가 곧 발표될 것이 틀림없으며, 그러한 발표는 ‘그 정부가 남북조선인 전체를 대변하는 남북회의에 참석했던 남북조선의 대표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정부’라는 선전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sup>64)</sup>

## V. 평양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

### 1. 평양회의의 진행과정

평양연석회의 개최일자가 다가오자 4월 초순부터 남북협상에 앞장서 온 남한의 정치인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백남운은 4월 5일 원산으로 넘어가서, 6일 평양에 도착했고, 홍명희는 10일 평양에 도착했다. 남조선 민전 산하 각 단체 대표 80명도 4월 12일 북으로 넘어갔다. 김일성은 4월 13일 김구·김규식의 회의참가를 기다리기 위해 연석회의 개최일자를 4월 19일로 연기했다.

4월 19일 오후 6시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막되었다. 개막회의에는 북한의 3개 정당과 12개 사회단체, 남한의 31개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추가로 남한의 10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20일 이후 평양에 도착하여 연석회의에 참석했다.<sup>65)</sup>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한 남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총수는 도합 56개(남한 41개, 북한 15개)였다.

64) *FRUS*(1948) VI, pp.1188-1191.

65) 정리근, 앞의 책, 89-90쪽, 96쪽.

회의 개막인사는 참석자 중 최고령자인 김월송이라는 무명의 노인이었으며, 개막 후 회의는 김일성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일성은 연석회의의 안건으로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대응책과 남한 단독선거 단독정부수립 반대 투쟁대책을 제안했으며, 회의는 김일성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연석회의는 김구와 김규식의 회의참석을 기다리기 위해 20일은 휴회했다. 19일 서울을 출발했던 김구와 그 일행은 20일 평양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김구는 김일성 및 김두봉과 짧은 시간의 면담을 가졌다.

둘째 날 회의인 21일 회의는 허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일성은 「북조선 정치정세」를 보고했고, 「남조선 정치정세」는 박헌영과 백남운이 각각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또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초안작성위원들을 선정했다.

셋째 날 회의인 22일 회의는 백남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 도중 김구 일행이 참석하였으며, 김구는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 민족의 유일최대의 과업은 통일독립의 전취인 것입니다. …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는 소위 단선단정입니다. … 현하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한 투쟁목표는 단선단정을 분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sup>66)</sup>라는 내용이 포함된 짤막한 축사를 읽었다.

21일 서울을 출발한 김규식은 22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 김규식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숙소에 누워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김일성과 김두봉이 김규식의 숙소를 방문했다.

넷째 날 회의인 23일 회의는 김원봉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모두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위원회 조직 결의」, 「미·소 양군 철퇴 요청서」, 「전조선 동포에 격함」 등의 문건이 채택되었다.

연석회의는 24일과 25일에는 휴회했고, 26일 연석회의의 마지막 날 회의를 개최했다. 홍명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 전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미국과 소련에 보내는 메시지(미군과 소련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청하는 메시지)도 채택되었다. 연석회의에 참가한 남북의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남조

66)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김구주석최근언론집』(1987), 46쪽.

선단독선거반대투쟁 전국위원회」의 위원장에는 허헌이 선출되고, 남북의 인사 50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 위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 폐막 후 단선반대투위는 별도의 회합을 가지고 투위의 본부는 해수에 두고, 현지투쟁 중앙지도부(책임자 이승엽)는 서울에 두기로 결정했다.<sup>67)</sup>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인사의 회고에 따르면, 연석회의의 토론방식은 자유토론이 아니었다. 남북 정치정세에 관한 보고연설 등에 대해 미리 지정된 토론 신청자가 원고를 써가지고 나와 10분 정도 낭독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발언 내용도 단선단정 반대, 미국과 이승만 비판 등 천편일률적이었다. 토론방식이 이와 같으니 회의진행도 북로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sup>68)</sup>

26일 남북연석회의가 공식 폐막되고, 27일부터 30일까지는 김구와 김규식이 요구했던 남북요인회담이 연회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27일에는 연석회의에 참석한 남북한의 지도자급 인사 15명이 참석한 15인회담(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조소앙, 홍명희, 조완구, 김봉준, 이극로, 엄항섭, 허헌, 박헌영, 백남운, 최용건, 주영하 등이 참가)이 개최되었다.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이 회담의 참여인사들의 사상경향과 활동경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회담은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요인회담이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 요인들과 남북한 공산진영 요인들 간의 회담이었다.

28일과 29일에는 김구와 김일성, 김규식과 김두봉의 개별 접촉이 있었고, 29일과 30일에는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등의 4인회담이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4인회담은 진지한 회담이 아니었다. 옆방에서 연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별실에서 진행된 사적인 간담회에 불과했다. 이 회담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한 어느 쪽에서도 단독정부가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38선으로 인해 급수가 중단된 연백평야에 농업용수 공급을 재개하고 수풍발전소로부터의 남한에 대한 송전을 지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안중근의 유해송환문제와 조만식의 석방 및 남한으로의 이송 등도 거론했다. 김일성은 연백평야 농업용수 공급 재개, 남한으로의 전기공급지속, 안중근 유해송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67)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352쪽.

68) 위의 책, 348-349쪽.

인 대답을 했고 조만식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 회담의 결과는 아무것도 문서화되지 않았고, 회담에서 합의되었다는 사항도 김구와 김규식의 수행원들이 구두로 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로부터 약 2주일 후 대남송전을 중단했고 연백평야에 대한 급수도 재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 회담에서의 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다. 30일에는 4인회담에 이어 15인회담이 재개되어, 「남북조선 제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을 출발하기 전날인 5월 3일 김일성은 자기의 집무실에 김구와 김규식을 한 명씩 초청하여 별도로 개별면담을 가졌다.

## 2. 연석회의 및 요인회담에서 채택된 문서들의 내용

평양의 남북연석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 「남조선단선단정반대투쟁대책에 관한 결정서」, 「소련과 미국에 보내는 요청서」 등 네 개의 문서가 채택되었다. 그 문서들의 주요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에서는 우리 조국을 분열하여 예측시키려는 미국의 반동정책을 지지하여 우리 민족을 반역하며 조국을 팔아먹는 이승만, 김성수 매국노들이 발호하고 있다. ...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까지도 박탈당하였으며 생활을 향상시킬 하등의 희망과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조선에 주둔한 쏘련군이 북조선인민들에게 광범한 창발적 자유를 준 결과에 북조선에서는 인민들이 ... 인민위원회를 확고히 하며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 조국이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로 발전될 모든 토대를 공고히 함에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인정한다. ...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들은 ... 남조선단독선거를 파탄시켜야 할 것이며 조국에서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하고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쏘련의 제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sup>69)</sup>

이 문서에 기술된 남북한의 상황은 당시 남북한의 실제상황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 문서는 “북조선에 주둔한 쏘련군이 북조선인민들에게

69)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보고문 및 결정서」(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자료총서』13(서울: 돌베개, 1986), 38-39쪽).

광범한 창발적 자유를 준 결과에 북조선에서는 인민들이 … 인민위원회를 확고히 하며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 조국이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로 발전될 모든 토대를 공고히 함에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회의참석자들이 북한지역에서 실시된 소련의 정책과 북한에서 진행된 사회주의화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 동시에 남한지역에서도 북한지역에서 전개된 것과 같은 일들, 즉 사회주의화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수긍했음을 확인해 준다. 이 문서는 또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라는 단독공산정권이 수립되어 공고화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남한에서 단독정권이 수립되는 것은 절대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하지 말고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요컨대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는 평양회의에 참석했던 남북한의 정당·단체 대표들이 남북한의 공산화통일을 인정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유엔총회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실시 결의, 유엔소총회의 남한지역 선거 실시 결의 등을 비난하고, 소련의 북한 정책, 미·소 양군 조속철군 후 한국문제를 한국인들에게 맡기자는 소련의 제의를 찬양하면서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북조선에서는 일체 정권이 해방된 조선인민의 수중으로 넘어오고 사회·경제·문화의 각 분야에서 위대한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어 빛나는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 … 남조선에서는 미국 강탈자들의 식민지적 테로 경찰제도를 수립하였다. 인민들은 일제시대와 같이 탄압·유린되고 있으며 강탈·파산되고 있다. … [미국인 오래 전부터 우리 조국을 분열하려는 길을 걸어왔으며 조선인민들을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철쇠로 얽매려고 시도하여 왔다. …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정책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 매국멸족의 죄인으로 우리는 단죄한다. … 소위 ‘선거’ 운운은 흉악한 허위이며 간교한 기만이다. … 외국의 노골적인 간섭 하에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 자기 주인들인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무도한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할 배족적 망국노들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승만, 김성수 등 매국도당의 반역음모인 것이다. … 본 연석회의는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력을 다하여 … 이 위원회에 참가하여 단독선거를 파탄시키는 열화 같은 구국투쟁을 전개하라!”<sup>70)</sup>

70) 박광 편, 앞의 책, 75-78쪽.

위 인용문 중 ‘북조선에서는 일체 정권이 해방된 조선인민의 수중으로 넘어오고 사회·경제·문화의 각 분야에서 위대한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어 빛나는 열매를 거두고’라는 구절은 이 문서에 서명한 정당과 단체들이 북한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지향 변혁들, 북한의 공산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인용문 중 미제국주의자들이 ‘조국을 분열하여 남한을 식민지화하려 했다고 비난하고, 남한에서 선거를 추진하고 정부를 수립하려는 세력을 ‘매국멸족의 죄인으로 단죄한다’고 말한 부분은 이 문서에 서명한 정당과 단체들이 소련과 북한공산세력의 공산화 통일을 지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이 인용문의 후반부는 전체 한국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남한선거와 남한 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 역시 이 문서에 서명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남북한의 공산화통일을 인정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남조선단선단정반대투쟁대책에 관한 결정서」는 평양회의에 참석한 남한지역 정당·단체들이 장차 구성될 남조선단선반대투쟁전국위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는 점과 그 위원회의 투쟁활동에 무조건 동조할 것을 약속한 문서이다. 「소련과 미국에 보내는 요청서」는 한국문제에 대한 소련의 제안을 소련과 미국이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남북연석회의의 폐막 후 개최된 남북요인회담을 거쳐 4월 30일 발표된 남북조선 제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 내용은 앞서 분석한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문건들의 내용에 비해 언어적 표현은 온건해졌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했으며, 새로 추가된 사항은 전조선정치회의 소집뿐이다. 성명의 전조선정치회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외국군대가 철폐한 후 左記 제 정당·단체들은 공동명의로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의 각종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정권은 정치·경제·문화 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째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서 통일적 조선입법기관을 선거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sup>71)</sup>

71)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의 보고문 및 결정서」, 김남식 외 엮음, 『한국현대사자료총서』13(서울: 돌베개, 1986), 54-55쪽; 《조선일보》, 1948년 5월 3일자.

오늘날 48년의 남북협상을 미화하는 사람들은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전조선정치회의의 개최 합의를 통일정부 수립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남북협상의 중요성으로 평가하고 있다.<sup>72)</sup>

그들은 위 인용문에 표시된 '左記 제 정당·단체가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한다'는 문구의 정확한 내용과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요인회담 공동성명문의 왼쪽에는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의 56개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평양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당과 사회단체의 명단이다. 따라서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전조선정치회의는 평양회의에 참석했던 정당·단체들이 소집하는 회의인 것이다. 그 회의는 남한의 최대 정당·단체인 우익진영의 정당·단체를 배제하는 회의이며, 남북한의 공산화통일을 인정하는 정당·단체들만의 회의인 것이다. 그런 회의에서 임시정부가 구성되면 그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지는 불문가지의 일이다.

한편, 이 공동성명에서 말하고 있는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란 1946년 11월 북한에서 실시되었던 비경쟁적 흑백투표함(공개투표) 방식의 투표를 뜻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선거에서의 '자유'원칙이 배제된 투표,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방식의 투표인 것이다.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정당과 단체들이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그 임시정부의 주관 하에 북한에서 실시되어 온 공산주의 투표방식의 투표를 통해 조선입법기관을 선거하며, 그 입법기관에서 통일적 정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통일정부일 수밖에 없다.

### 3. 평양회의의 폐막 이후 남한 측 참여자들의 동태

48년의 남북협상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평양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평양에서 행한 언동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평양에

---

72) 서중석,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서울: 한울, 2000), 223쪽; 서중석, 「남북 지도자 회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220쪽; 강만길,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동아일보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1(서울: 동아일보사, 1987), 215-216쪽.

갔던 남북협상과 인사들은 연석회의의 중간에, 그리고 연석회의가 폐막된 후 북한정권의 안내에 따라 평양에서 개최된 연석회의 개최 축하 평양시민대회와 메이데이 군중대회를 참관했으며, 평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의 산업시설과 학교들을 '견학'했다. 남한의 협상과 지도자들은 또 북한정권의 인사들이 그들과 인간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베푼 각종 연회에 참석하였다. 그런 행사, '견학', 연회 등에 참석한 남한의 인사들은 북한의 상황과 김일성을 극구 찬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김규식: 조선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련의 제의가 불가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유엔소총회는 남조선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지는 비법적 결정을 채택했다. ... 나는 오늘 남북협상지지 평양시민대회를 보고 눈물이 났다. ... 남조선의 지위를 오늘날의 북조선 지위와 비교한다면 천양지차가 있다. 북조선으로 오니 북조선은 살 토대가 있다. ... 남쪽은 망하는 집안 같고 여기는 새로 잘되는 집안 같다.<sup>73)</sup>

△ 홍명희(민족자주연맹부위원장): 황해제철소를 시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설사업이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를 전조선에서 나누어 갖고 싶었다. ... 나는 25일 평양시민들을 보았는데 남조선의 군중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했다. 이것은 잘 되어가는 집안과 못 되어가는 집안을 비교하면 족할 것이다.<sup>74)</sup>

△ 강순(근로대중당 당수): 나는 희망에 찬 동포들을 보았다. 나는 북조선을 이렇게 발전시킨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에게 경의를 표한다. ...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조선통일정부의 기초라고 생각한다.<sup>75)</sup>

한편, 김구는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각종 문서들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구는 4월 27일 《조선일보》 기자와의 회견에서 “제 결정서에 대해서는 단선단정반대가 그 취지인 만큼 그에 찬동한다”라고 말했다.<sup>76)</sup> 김구는 또 5월 3일 김일성과 가진 면담에서 “만일 미국인들이 나를 탄압한다면 북한에서 나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김일성에게 물었고, 김일성은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sup>77)</sup> 김구가 5월 10일까지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하려 할 것으로 예상<sup>78)</sup>할 정도로 자신의 신변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73) 박광, 앞의 책, 68-69쪽.

74) 위의 책, 103쪽.

75) 위의 책, 105쪽.

76) 《조선일보》, 1948년 5월 3일자.

77) 《중앙일보》, 1994년 11월 24일자에 보도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5월 3일자.

78) 《중앙일보》, 1994년 11월 15일자.



김구-김일성 간의 그러한 대화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구와 김규식은 5월 4일 평양을 출발하여 다음날 38선을 넘어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평양회의에 참석했던 남한의 남북협상과 인사들 가운데 약 70명은 평양에 잔류했다.<sup>79)</sup> 연석회의에 참석한 후 평양에 잔류한 남한 인사가 70여 명이라는 사실은 평양에 간 남한 인사들 중 많은 수가 북한정권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협조하기 위해 평양에 갔음을 의미한다.

평양연석회의에 참석한 남한 인사들의 정확한 숫자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다. 남북협상에 관한 북한의 대표적인 문헌인 정리근의 책에 따르면, 연석회의에 참가한 남한 인사들의 총수는 395명이다.<sup>80)</sup> 그러나 정리근의 이러한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북한의 학자들은 선전적인 이유에서 연석회의에 참가한 남측 인원수를 부풀리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 신뢰성이 높은 수치가 「레베데프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비망록에는 연석회의에 참석한 남측 인원수가 22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81)</sup> 「레베데프 비망록」의 수치를 받아들일 때, 연석회의에 참석한 남측 인사 226명 중 70여 명이 평양에 잔류했다는 사실은 연석회의 참석자의 약 3분의 1이 북한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주장한 자들이었음을 시사한다.

## VI. 결론

이상의 서술을 토대로, 48년 4월에 진행된 남북협상의 본질을 밝혀주는 중요한 사항들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다.

(1) 47년 10월부터 북한정권과 남한의 좌경중도와 정당들이 남북협상을 제의한 것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를 저지하기 위해 소련이 제안한 미·소 양군 조속철수론을 지원하고, 남한의 정치적 혼란상태 지속을 이용한 공산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미·소 양군의 조속철수

79) 김광운, 앞의 책(2003), 612쪽.

80) 정리근에 따르면, 연석회의에 참석할 북한 측 참석자 수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300명으로 정해졌고, 연석회의에 참석한 총인원 수는 695명이다. 따라서 참석자 총수 695명에서 북측 참석자 300명을 빼면 395명이 남고 그것이 남측 참석자 수가 된다.

81) 《중앙일보》 1994년 11월 21일자에 보도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19일자와 21일자에 기록된 남측 참석자 수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러한 계산이 나온다.

론과 남북협상론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미·소 양군이 조속철수하고 나서 한국인끼리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면 일단 남북한 정치세력들 간의 협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정치세력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면 유엔에서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 문제를 토의할 명분이 없어지고, 외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도 없어진다. 유엔이 남북한 총선실시를 결의한 후부터는 남북협상론은 남한에서의 선거 저지를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북한에는 공고한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있고 남한에는 한국인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의 선거가 저지되면 남한에서는 정치혼란이 지속될 것이고, 그러한 정치혼란의 지속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정치공작이나 군사력 동원을 통해 남한마저 공산화하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북한정권은 남한의 모든 세력과의 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선거에 반대하는 남한의 정치세력과 협상할 것을 추진했던 것이다.

(2) 남한에서 남북협상을 앞장서서 제의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전개한 인사들과 정파들은 대부분이 이미 북한정권에 포섭되어서 북한정권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홍명희, 백남운, 이극로 등을 비롯한 중간파의 지도자급 인사들과 권태양, 강병찬, 안우생, 김홍권 등 중간과 정당들의 중간간부급 인사들 및 남한선거 반대 정치지도자들의 측근인사들은 모두가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남북협상을 제안하고 남북협상을 위한 남한 측 준비작업을 선도했다.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과연합에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정권에 포섭된 지도자급 인사들은 두 김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상층공작을 전개했고, 중간간부급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두 김의 측근들은 두 김에게 남북협상을 제의·추진하도록 건의하게 만드는 하층공작을 전개했다. 그들은 또 북한정권과 두 김 간의 접촉을 주선하고 접촉을 위한 연락원 역할을 했다.

(3) 북한정권은 남한선거 저지를 위해 북한정권과 남한 내 선거 반대세력들을 하나의 전선체로 묶는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했으며, 특히 그 통일전선에 우익진영 내에서 선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남한 정계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김구가 남한선거 반대 통일전선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그를 통일전선에 끌어들이려는 북한정권의 집요하고도 강력한 공작, 한민당의 자신에 대한 모멸적 행동에 대한 김구의 분노, 남한선거에서 한독당이 몰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김구가 남북협상을 제의·추진하면서 그 목적으로 표명한 민족분단의 방지는 당시의 남북한의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볼 때 실현가능한 목적이 될 수 없었다. 북한에서 이미 단독 공산정권이 공고화되었고, 사회주의화 변혁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민족이 분단된 당시의 객관적 정세를 고려할 때, 그리고 김구가 공산화통일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김구가 민족분단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정권이 주도하는 남한선거 반대 통일전선에 참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행동이다. 김구가 진정으로 민족분단을 방지하려 했고 공산화통일을 원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분단을 통일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조치인 46년 2월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과 그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북한사회의 사회주의화 변혁을 비판하고 저지했어야 했다. 북한에서 인민회의라는 국회와 인민위원회라는 정식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사회주의화 변혁이 크게 진전되어 남북한이 이질적인 통치단위로 분단된 후에야 민족분단을 방지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선거와 정부수립에 반대한다는 것은 북조선민주기치론에 입각한 공산화통일을 지지할 경우에만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다.

(4) 남북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의 모든 사항은 북한주둔 소련군 지휘부 및 북한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진행되었으며, 남측 참석자들은 소련군 지휘부와 북한정권이 작성해 놓은 각본대로 행동한 조연급 배우들에 불과했다. 소련군 지휘부는 회의의 연사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회의에서 채택할 문서의 종류와 내용과 표현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북한정권에 지시했다. 따라서 남북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의 결과는 소련과 북한정권이 희망하는 바대로 되었다. 남북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에서 채택된 문서들은 북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사회주의화 변혁이 전개된 것을 잘한 일로 평가하고, 북한에서 행해진 일들을 남한이 표본으로 삼을 것, 곧 공산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접적 표현으로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한 문서들의 채택에는 김구·김규식의 소속정당들도 찬동했다. 김구는 자기가 그런 문서들의 취지에 찬동한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김구가 그런 문서들의 ‘취지에 찬동한다’고

말한 것은 그 문서들이 남한선거 반대만을 천명한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그 문서들은 단지 남한선거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산화통일에 대한 회의참석자들의 간접적 승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만일 김구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문서들의 취지에 찬동한다고 말했다면 김구는 공산화통일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선의로 해석할 때, 남북협상과 관련하여 김구·김규식은 소련과 북한정권에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정구성원의 한 사람이며 당시 남한 중도파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가 북한정권의 일방적 태도에 반발하여 평양에 가지 않았던 유림이 평양연석회의를 ‘헌법을 준비하여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회의’, ‘탁치와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당의 영역확대를 추구한 회의로 비판하면서 두 김이 그 회의에 참가한 것이 과오였음을 성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사실<sup>82)</sup>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5)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관련 활동을 미군정이 탄압하거나 남한 우익진영이 과격하게 방해하는 일은 없었다. 미군정은 북한정권 주도의 남북협상이나 두 김의 남북협상 참여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했지만 두 김을 은밀하게 설득하여 평양에 가지 말도록 만류하려고만 했을 뿐 그들을 공개적으로 탄압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두 김의 남북협상 행보를 냉소적으로 방관했으며, 오히려 그들의 안전여행에 협조해 주기까지 했다. 우익진영도 김구의 남북협상에서의 선회를 배신적 행위라고 구두로 비난했지만 두 김의 남북협상 관련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격렬하게 행사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우익진영의 최고지도자 이승만은 두 김의 남북협상 관련활동에 대해 격렬한 용어를 사용하여 비판하지는 않았다.

(6) 소련군 지휘부와 북한정권은 인민민주주의적 통일헌법의 제정과 남북협상을 동시에 병행 추진했다. 남북협상을 제안·추진·진행하는 동안에 북한정권은 남북한 전체에 적용할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초안을 작성·심의·선전·채택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했다. 심지어 북한정권은 자기들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남북협상 공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홍명희나 백남운 등을 북한으로 불러들여서 인민민주주의 통일헌법에

82) 《경향신문》, 1948년 7월 10일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그러한 통일헌법에 대한 남한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지시했다. 북한정권은 평양에서 남북요인회담이 진행중인 4월 29일 남북한 전체에 적용될 인민민주주의헌법을 공식 채택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행동은 그들이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선거와 정부수립을 방해·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민주주의적 통일(곧 공산화통일)을 추진했으며 그것을 돕기 위해 남북협상을 추진했음을 입증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문헌은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 하에 미제의 로골적인 식민지화 정책에 직면하여 일방으로는 북조선 민주기지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민주기지에서 달성한 제 민주성과를 법적으로 고정화하기 위한 조선 헌법 초안을 제정하는 사업을 조직 전개하는 한편,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 근거지-민주기지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인민군대를 창건하였으며, 타방으로는 4월 남북 련석회의를 소집하여 남조선 단선을 파탄키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였다”라고 기술했다.<sup>83)</sup>

(7) 48년 남북협상에 참여한 남한 인사들 가운데 김구·김규식을 제외한 다수의 인사들은 북한정권이 추진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협조하는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그런 사실은 남북협상에 참여한 남한 인사들이 평양 체류 기간중에 보인 언동(북한의 상황을 찬양하고, 김일성과 북한정권에 아첨하는 언동)과 그들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점에 의해 입증된다. 남북협상에 참여한 남한 인사들 가운데는 순진한 민족주의 감정에서 참여한 인사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또는 북한정권의 공작에 넘어가서 그들과 공동행동을 취했다. 순진한 민족주의 감정에서 남북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시 남북한의 객관적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소련과 북한정권에 이용당했던 사람들이다. 김구와 김규식도 그 범주에 속한다. 외면적으로는 순진한 민족주의자들이 남한 내 남북협상과를 주도한 것처럼 보였으나, 내면적으로 남북협상과를 주도한 것은 북한의 인공 수립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이었다.

83) 리나영, 앞의 글, 77쪽.

## 참 고 문 헌

- 강만길,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동아일보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1, 서울: 동아일보사, 1987, 201-223쪽.
-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어느 혁명가의 수기』. 서울: 사계절, 1987.
-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1. 서울: 선인, 2003.
- 김광운, 『통일독립현대사』. 서울: 지성사, 1995.
-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로버트 올리버, 박일영 역, 『이승만 비록』. 서울: 한국출판문화사, 1982.
- 리나영, 「민주기지 창설과 강화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력사과학』 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력사학연구소, 1955, 69-88쪽.
- 박광, 『진통의 기록』. 서울: 평화도서주식회사, 1948.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김구선생최근언론집』. 1987.
- 송남헌, 『해방 3년사』 I-II. 서울: 까치, 1985.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 서중석, 「남북지도자 회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202-221쪽.
- 서중석,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서울: 한울, 2000.
- 신복룡, 『한국 분단사 연구』. 서울: 한울, 2001.
-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서울: 현음사, 2001.
- 유영구, 「거물간첩 성시백 프로젝트」. 『월간중앙』 1992년 6월호, 634-667쪽.
-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서울: 신구문화사, 1974.
-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의 보고문 및 결정서」(1948). 김남식 외 엮음, 『한국현대사자료총서』13, 들베개, 1986. 38-55쪽.
- 정리근, 『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조규하 외, 『남북의 대화』. 서울: 한얼문고, 1972.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 서울: 중앙일보사, 1993.
- 최영환, 「해방 후 조선 혁명에 있어서의 북반부 민주 기지」. 『력사과학』 10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학연구소, 1955, 41-65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서울: 선인, 2001.

Lankov, Andrei, "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From Divis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 Th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olitics, 13-15 July 2005, pp.62-80.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ol,VI, 1948 vol,V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1974.

《경향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로동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성일보》.

## 국 문 요 약

1947년 10월 초 이후,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회의(남북협상)를 개최할 것을 거듭 제의했다. 김일성이 그런 제의를 한 목적은 유엔이 한국문제를 토의·결의하는 것을 저지하고, 남한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이 실시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에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공작을 전개했다. 특히 김구와 김규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의 그러한 공작에 말려들어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북한주둔 소련군 지휘관들과 김일성은 평양회의의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았다. 남한주둔 미군과 남한의 우익세력은 평양회의를 방해하지 않았다. 평양회의는 소련군과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고, 남한 참여자들과 북한 참여자들 간의 협상은 없었다. 그 회의는 소련과 김일성이 계획해 놓은 결의들만 채택했으며, 그 결의들의 내용은 남한 총선 저지를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촉구하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통일 의지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투고일** 2010. 4. 7.

**수정일** 2010. 5. 24.

**게재 확정일** 2010. 6. 8.

**주제어(keyword)**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남북협상)(The Conference of South-North Korean Politicians), 남한 총선(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협상부재(the absence of negotiation)